

끝이 없는 학폭... 예방 시스템 구축을

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다문화학생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 필요

학교 체육시설 개방·확대

혁신학교 일반화 등 주문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12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첫 날, 학교폭력과 학교체육시설 개방, 도내 유치원 현황, 혁신학교 문제점을 집중지적하며 교육감의 태도변화와 교육계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대응 시스템 역부족과 도내 혁신

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예산과 정책, 현장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지만, 도교육청의 대응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면서 "학교폭력 징후와 관리, 그리고 치유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다문화가정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가정책도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이해교육과 다문화학생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박희자(비례대표) 의원은 "다문화교육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통한 학교 다문화교육 통합·연계 지

원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중언어 강사, 한국어 강사 등 강사 채용·지원과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 편입학 시 학교 컨설팅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교육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 "지역내 학교 체육시설들의 시인 개방률이 저조하다"면서 "도교육청은 공공시설인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확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체육시설로 사용되지만 해당 시설은 교육시설이라 이를 개방할 경우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고려해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형석(비례대표) 의원은 학교폭력

전문상담사와 관련해 "전문상담사 등의 응시자격요건이 특정 학회만을 인정하고 있어, 타 기관에서 발행된 자격증 소지 상담사들은 전문상담사로써 응시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특정 학회의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영규(익산4) 의원은 "도내 혁신학교를 시작한 20개 학교는 지난 8년 동안 약 55억에 달하는 예산이 지원됐으며 특히,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전주 덕일중, 진안 장승초, 남원초의 경우 예산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지정된 20개 교 중 무주 무풍중의 경우 지난 2016년까지 혁신학교였지만, 중단된 사유에 대해 뚜렷한 답변이 없는 도교육청을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北 송이버섯에 대한 답례... 南 제주감귤을 싣고

12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산 감귤을 실은 군 수송기(공군 C-130)가 평양 순안공항을 향해 이륙하고 있다. 이날 평양으로 보내는 귤은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때 북측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남측이 답례하는 것이다.

“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대상지 재검토해야”

도의회 최영심 의원, 농식품국 행감서... 거점소독시설 소독제 독성여부 검토도 주문

전북도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대상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사진)은 12일 열린 농축수산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 농식품부가 김제시 백구면 일원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지역 주민 대상 공청회를 공문신청 1주일 전에 1차례 진행한 게 전부"라며 지역 주민을 무시한 탁상공론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생태 자연습지인 부용저수지를 매우고 인근 용지저수지를 인공습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 전에 조속히 사업대상지를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각 시군에 설치하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제를 사용하고 폐수처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실태를 지

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도내에서는 101개소의 거점소독기설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11만3,626L에 이르는 소독제를 사용했으나 대부분 부직포에 흡수시켜 노면에서 자연건조하고 있다"며 "폐수처리가 안된 소독제는 농수

로 오염원이 되고 있어 곧 농작물에 흡수되어 우리 도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소독제 선정 시 독성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사용한 소독제의 폐수처리 기준과 소독제가 흡수된 부직포 처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에 무상지원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을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김진성 기자

‘유치원 3법’ 심사 ‘난항’

여야 유아교육법 두고 이견... 15일 본회의 처리 여부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유아교육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보여 15일 본회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유아교육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의 시·도 교육감에 사립유치원 회계 설치 및 운영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날 소위에서 ‘유통 3법’이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할 경우 1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오늘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회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며 "이번주 본회의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는 "법률이 아니라 교육감 판단과 결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당 역시 해당 조항을 두고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상정, 15일 본회의 통과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3법"이 유치원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면서도 "벌어지고 있는 유치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처방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당은 각계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만들어 병합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번 사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외에 타 의원들의 인을 포함하여 병합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뉴스1

한국당 조강특위 ‘경질’ 전원책 “14일 입장 밝힌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내년 전당대회 개최 날짜로 극심한 갈등을 빚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경질된 전원책 변호사(사진)가 오는 14일 기자회견을 연다.



전 변호사는 지난 10일 오후 뉴스1과 통화에서 기자회견이 어디까지 말을 해야할지 여부가 고민이라고 언급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 9일 비대위에게 문자해촉을 당한 직후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월말 전당대회를 하라는 이야기는 나를 정말 하중업체 취급하는 것"이라고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며칠 안으로 입장정리를 해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식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조강특위에 특정 인물을 넣어달라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하는 등 기자회견장에서 김 위원장과 갈등사실을 폭로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뉴스1

문 대통령 지지율 55.4% · 민주당 지지율 40.7%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0.2%p 소폭 떨어진 55.4%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ds 의뢰로 5~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공개한 10월 5주차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p·응답률

7.4%)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5.4%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0.6%p 하락한 40.7%를 기록했다. 이어 자유한국당(20.7%), 정의당(8.4%), 바른미래당(7.3%), 민주평화당(2.6%) 순으로 집계됐다. /뉴스1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